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조시영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의당, 親 중소기업 정당”

심상정 정의당대표-중기인 간담회
“韓 경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大-中企, 수평적 관계 만드는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정의당은 친 중소기업, 친 자영업자 정당”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의당은 친 노동아니냐고 했는데, 친 중소기업, 친 자영업자 정당임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종속관계를 수평 협력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김중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8명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의당 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며 “한일관계 등에 대해 정의당 대표께서도 경제민주화와 공정 경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나 상생 등의 대안들이 재정립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대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다름없는 공격에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개혁해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전달했다”며 “반일 앞세워서 대기업 소원수리 받아주지 말고, 이번이야말로 공정경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정의당 의원 6명 중에 5명이 여기 와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키겠다는 일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 여러 정당 중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부품·소재 국산화대·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日 기업·개인, 국내특허 11.4만건 “소재 등 국산화 넘어 ‘기술독립’ 필요”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권이 총 11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장비 등 품목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총 11만4451건이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번 발표 수치는 1999년 이후 나온 특허만 집계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 관련 특허가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3223건으로 뒤따랐다.

연도별 추이로는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만3900건으로 치솟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후 지난해에는 1570건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 기준 103건을 기록했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국내 기업이 받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적극적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해외사업장 25%만 줄이고 韓 복귀해도 ‘유턴기업’ 인정

산업부, 유턴법 개정안 시행

생산품목 다변화·복귀 돕기 위해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소분류 완화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국내 사업장 생산품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 일치	소분류(3단위) 일치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축소	생산량 25% 이상 축소

/자료=산업부

해외 사업장을 4분의 1만 줄이고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국내·해외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세분류는 소분류보다 더 세밀하게 나눈 개념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

신장비, 세분류코드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휴대전화 부품(무선통신장비, 세분류코드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소분류코드 264)으로 간주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文 대통령 “日 경제보복, 감정적 대응 안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다만)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감정적 대응 거리두기’를 언급한 이유는 다가올 8·15 광복절과 연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있다.

문 대통령은 “사후하면 광복절”이라며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즉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을 지향하는 게 우

리민족의 정신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임을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여야 5당대표, 日 대응 입장차 여전

초월회서 현안 해결책 모색

여야 5당 대표는 12일 초월회 회동에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초당적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당론과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보수권은 물론 범진보진영도 문재인 정부의 현안 대응 태도를 지적하면서 정국 경색이 다시 고조하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더불어민주당)·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등 각 당 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 정국 현안 해

결책을 모색했다.

9월 정기국회 전 사실상 마지막 초월회인 이 자리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북한 신행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선거제도 개혁 ▲문재인 정부 내각 개편 ▲정기국회·예산심사 등 대내·외 현안이 화두로 올랐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는 뜻의 ‘동주공제’를 강조했고, 민주당 이 대표의 경우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역량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야권을 설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여야대표 초청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당 황 대표는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우리 당은 처음부터 (여권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당정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